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03 / Mar. 2017

03

기획 특집

음면동 복지허브화

최성락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재정 논단

dBrain의 수출

배득중 연세대학교 교수

현안 분석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표 관리

박소영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국가재정 업무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작 : START



Global Finance Platform Builder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 04 권두언**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 08 기획 특집**
읍면동 복지허브화
최성락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 16 재정 논란**
dBrain의 수출
배득중 연세대학교 교수
- 24 현안 분석**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지표 관리
박소영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 36 국민이 바라본 나라 재정**
청년 대상 일자리 중복 사업 통합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남대건 고려대학교 4학년
- 40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
연기금투자율 제도란?
- 46 동향과 소식**
국외 재정 동향
- 54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재정의 봄을 그리며

재정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정부 경제활동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모두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운영과 정부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것이고 그 혜택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것입니다.

하지만 연일 국민에게 전달되는 재정 소식은 3월 봄기운과 달리 춥고 어둡습니다.

“정부 재정적자 95조, 1인당 국가채무 1250만원 돌파 10년 새 2배, 작년 첫 600조원 돌파, 국가채무 1초당 139만원씩 증가”

“2020년 국가채무 800조원 코앞, 증가 속도 성장률 2배,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151.8%에 달할 전망...”

이와 같이 뉴스의 정치와 경제면엔 온통 재정에 관한 부정적인 소식과 전망뿐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저출산·초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재정 수요 전망 역시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복지 지출을 억제하는 통제 일변도의 재정 건전화 정책이 아닌,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공평 과세 조세정책과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악화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소시켜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입 여건은 악화되었으나 고령화 등으로 복지 지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정책의 시급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월간 나라재정>이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저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재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재정정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역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가 운영의 근간인 재정이 건전하게 존립하는 재정의 봄날을 그리며—

2017년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박 광 온**

기획 특집



기획 특집은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정책 방향 및 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최성락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최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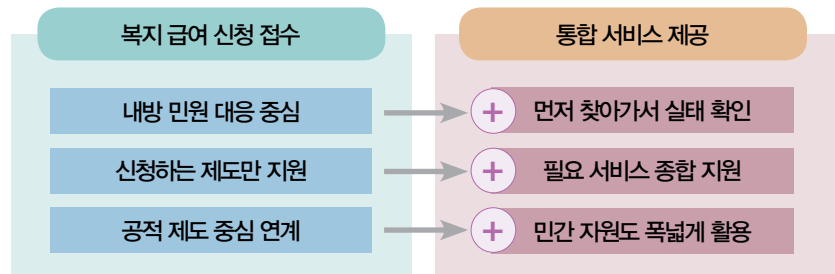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csr502@korea.kr

복지 통합 서비스로서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6년 2월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마련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을 통과시켰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기존에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찾아오는 내방 민원을 위주로, 주민들이 신청하는 공적 제도만 지원했던 것에서 벗어나 ①선제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②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③민·관 연계·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복지 전달 체계 개편 사업이다.



복지 사업과 복지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화된 국민의 복지 욕구에 맞추어 복지 체감도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8년까지 전국 3502개 읍면동을 목표로 확산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6년 12월까지 1094개소(31.3%)에 확산했으며, 2017년에는 2246개소(6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1.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성과

찾아가는 방문 상담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2010년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은 평균 3명이었다. 주민센터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담하고 각종 민원 신청을 접수하는 데 벅찼다. 평균 상담 시간은 30분도 미치지 못했고 민간 서비스 연계나 사후 관리는 불가능했다. 지금은(2016년 말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평균 5명의 공무원이 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취약 계층뿐 아니라 내밀한 상담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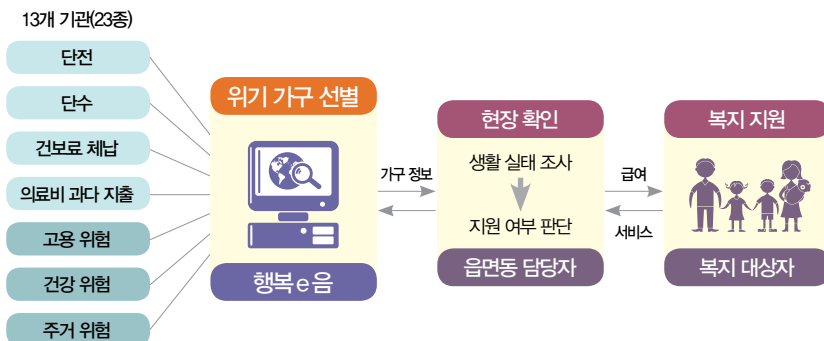
한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집중 상담을 제공한다. 2016년 한 해에만 초기 상담과 사후 모니터링 상담을 합하여 총 106만 건의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방문 상담으로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및 우울증·대인 기피 등 가구 내 위기 요인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우수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과 함께 다양한 방문형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상담을 제공하고, 경로당과 지역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읍면동 소재 공공·민간 기관 및 주민들이 공식적·비공식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참여하여 상시적이고 다각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했다.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또는 기존에 수급을 받다가 탈락한 대상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뿐 아니라 움막, 여인숙 등 취약 지역 거주자, 동절기 단전 가구, 찜질방·고시원 장기 거주자 및 아동 동반 투숙자 등 지역별로 테마를 정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보건소의 방문 간호사, 복지관의 돌봄 인력 등 방문형 공공 서비스 기관, 수도·전기 검침원, 학습지 교사 등 민간 방문 서비스와도 연계·협력해 상시적인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힘을 보탰다. 단전·단수·의료비 과다 지출 등 23종의 외부 연계 정보와 장애 유무, 가구원 건강 등 내부 정보 34종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기 가구를 선별해 리스트를 만든 후, 읍면동 담당자가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 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6만 7천여 명을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를 제공했고, 저소득층 감면 서비스(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대상임에도 알지 못하고 있던 7만 4천 가구에 신규로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대상자 발굴 처리 체계〉



“몸이 불편해 도우미 없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것도 미안해 몇 년간 못 갔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네요.”
건강보험료 체납 독거 가구(서울 강서구 박○○ 님, 80대)



건강보험료 지원

보건소 건강 관리

민·관 협력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

사례 관리는 복지·고용·주거·교육·법률·정신 문제·사회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회복해 나가는 능력을 상실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립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민간 복지관에서도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에서는 지역의 전체 민관 복지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공공 분야의 통합 사례 관리는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희망복지지원단을 시군구에 설치해 선제적인 사각지대 발굴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2016년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보완했다.

또한 읍면동이 지역 민관 협력의 중심으로서 공공 및 민간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을 파악하여 제공 서비스 현황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는 상시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기부 활동의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하고 더 큰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 협력 조직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 복지 대상자와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지역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로의 연계를 추진 중이며 지역사회 문제의 자체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취약 계층 지원 사례

- (강원 동해시 천곡동) 지체 4급의 조모, 양육을 회피하는 부친과 함께 사는 아동 김○○(13세)을 맞춤형 복지팀이 민간 기관과 함께 발굴 → 복지 급여 신청·지급(한 부모 가족, 차상위 장 애수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개인 상담과 심리 검사 진행, 아동 상태에 대해 병원 연계 의뢰 검사 후 장애 등록, 이후 매월 후원금(개인 후원) 및 기초 학습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며 사후 관리 중

읍면동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상시적
연계·협력 체계 마련

지역 특화 사업

- (충남 서천군 마산면) 마산면은 농어촌 버스 운행이 되지 않아 버스 승차장까지 40분 이상 도보 이동이 필요한 마을이어서 면 협의체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진료보조 택시바우처' 사업 추진
- (부산 서구 아미동) 마을의 변화를 논의하여 빈집을 사랑방으로 조성해 점심 밥상 나누기 사업 등 주민 쉼터 형성

2.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방향

전국 64%에 순차적으로 설치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3502개 읍면동에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2016년에는 전국의 31.1%인 1094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를 추진했다. 개별 읍면동마다 공무원 2~3명으로 구성된 별도 전담팀(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기본형이 576개소, 읍면동 2~3개소를 한 권역으로 묶고 그중 중심동에만 전담팀(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는 권역형이 518개소다. 공무원 2397명과 사례 관리자 222명, 방문 간호사 203명 등 민간 인력도 739명 배치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신규 1152개소, 누적 2246개 읍면동까지 전국의 64%에 확산하고자 한다. 2017년 신규 총원하는 복지 직렬 공무원 2422명과 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대책에 의해 총원하는 신규·재배치 행정직 등 공무원 503명까지 2925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3년간
전국 64% 읍면동에
단계적으로 확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실적 및 계획

구분	허브화 적용 읍면동 계 (A+B)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읍면동 (A+C)	기본형 (A)	권역형		
				소계(B)	중심동 (C)	일반동
2016년(완료)	1094개소	738개소	576	518	162	356
2017년(예정)	1152개소	798개소	618	534	180	354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과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또는 민간의 복

지관 프로그램 및 후원 물품과 후원금 등을 연계한다. 공적 급여나 민간 자원 연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긴급한 의료비·난방비, 체납된 주거비와 공과금, 주거 환경 개선이나 기타 물품 등은 각 읍면동마다 지급하는 사례 관리비를 통해 해결한다. 작년에는 기본형 읍면동당 600만원, 권역형의 중심 읍면동당 9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금년에는 기본형 읍면동당 840만원, 권역형의 중심 읍면동은 840만원에 일반동 1개소당 25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증액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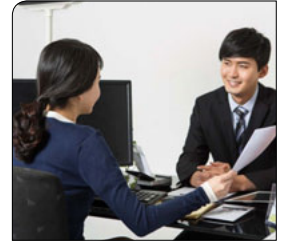
2017년에는 작년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나타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완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작년에는 선도 지역(33개소)에만 우선 보급했던 방문 차량을 2017년에는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모든 읍면동에 확대 보급한다. 전기차 1218대, 가솔린차 504대 등 1722대 차량이 조달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지역별 설치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배된다. 각 읍면동의 면적이 구의 평균적 면적 규모여서 방문 상담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중소 지역, 농산어촌에서도 방문 차량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취약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다.

선도 지역 멘토링 제도로 높은 수준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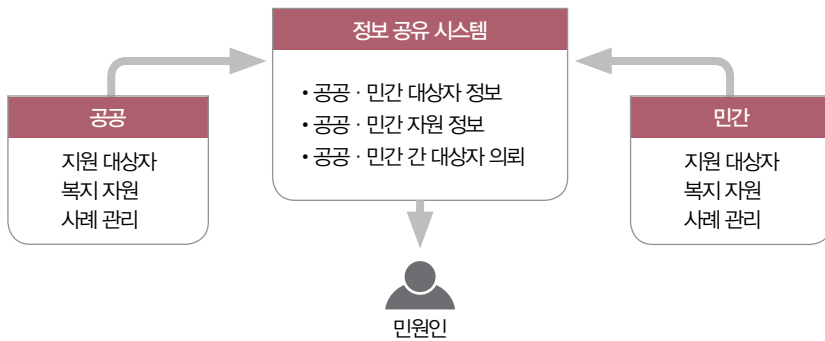
또한 전국적으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에 따라 선도 지역 멘토링 제도를 도입했다. 통상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적 제도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만 결정하고 지급하던 기존 업무와는 다르게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지역 의제를 찾고 특화 사업·사각지대 발굴 등 기획하는 업무여서 담당자 역량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 지역 구축 수준에 머물렀던 선도 지역 사업에 올해에는 적극적인 멘토링 기능을 부여했다. 2016년에 활동이 우수하고 타 지역에 멘토링을 제공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36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 지역들은 인근 지역 중에서 작년에 활동이 부진했거나 금년에 신규 추진하는 읍면동 중 6개소를 멘티 지역으로 선정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SNS 활동을 통해 수시로 조언을 나눈다. 이는 단순히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각 지역의 복지 역량을 강화해 어느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공공 기관이나 복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복지사업이나 대상자를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현행 시스템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대상자의 연령·주거 환경·건강 수준 등의 정보나 제공되고 있는 물품·서비스, 진행 상황 같은 각종 정보를 공유하

기 어려워 생필품·식품 등 물품 지원에도 중복·누락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본 정보·자격·수혜 이력 중에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통합 연계 서비스에 필요한 타 기관에서도 조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민관 정보 공유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3월부터 부산 지역에서 복지 대상자의 복지 제도 자격 여부와 수혜 이력 등 일부 기능에 한정하여 종합·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차후 국민연금공단,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에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관 정보 공유 시스템 프로세스〉



선제적·긍정적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 필요

3. 맺음말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이 아니라 수동적인 복지에서 선제적·긍정적인 복지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복지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공적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민간 복지 자원을 찾아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하며, 복합적 문제를 가진 이웃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 관리를 병행한다. 각 지역마다 우리 이웃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의제를 선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며, 복지 대상자를 단순히 지원받는 사람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주민이며 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포용하게 될 것이다. 다만 내년도까지 전국 읍면동에 확산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가 선결 조건이다.

재정 논단



재정 논단은 전문 정보와 정책 진단 및 제언 등
재정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재정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공간입니다.

dBrain의 수출

배득중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배득중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dbae@yonsei.ac.kr

세계에 우뚝 선 dBrain 시스템의 위상

dBrain의 수출

1. Wonderful dBrain

2008년에 론칭한 한국통합재정정보시스템(일명, dBrain)은 2013년 5월에 크나큰 업적을 이루어 냈다. 국제연합이 수여하는 UN행정상에서 대상을 획득한 것이다. 하루 47만 건, 금액으로는 7.1조원의 전자 자금 이체를 10여 년간 무사고로 달성해 내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매년 많은 나라에서 dBrain을 견학하러 온다. 대상을 수상한 2013년에는 28개국에서 25회나 방문하였다. 이후 러시아와 에콰도르는 dBrain 수입 의향을 보이며, MOU를 체결했다.

2. 처음부터 수출을 겨냥했던 dBrain

dBrain 구축을 처음 기획할 때의 철학은 2C2P였다: 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comprehensive), 원가를 관리하자(cost manageable). 재정 정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고(prompt),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가공할 수 있게(processible) 해 주자.

이런 4대 철학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바로 기획할 때부터 수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가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에도 이어져서, 정보원의 두 번째 미션이 dBrain을 수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MOU도 많이 맺었는데, 아직 수출 실적은 없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들은 한국의 dBrain에 찬사를 보이면서도 수입할 의사는 없다. 자기 나라에서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흥 경제국들 역시, 다소 힘에 부쳐도 자신의 힘으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예, 브라질은 SIAP, 인도네시아는 SPAN).

셋째, 개발도상국들도 dBrain에 관심이 있지만 6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조달하기가 힘들다.

3. 타산지석(他山之石)

이상의 정책들을 감안하면, dBrain의 첫 번째 수출 타깃 및 전략은 개발도상국에게 ODA 자금을 통해 저렴한 시스템을 개발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 선진국 등이 개도국에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겪은 고충을 반추해 보자.

1) 재발 비용(Recurrent Cost)의 문제

대부분의 보조금이 그렇듯, ODA도 시스템 구축비를 위주로 지원한다. 의무적인 유지·보수 기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단기이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후진국으로서는 고치는 유지·보수 비용 등 재발 비용(recurrent cost)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IT 전문가를 초청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모듈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곤 한다. 그 결과 시스템 구축 후 수년이 지나면, 원래 프로그램의 일부(30%, 10% 등)만 쓰다가 폐기하고 만다.

재발 비용 및 한국과
상이한 조직문화는
dBrain 수출의 걸림돌

2) 평등과 분권의 문화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과거에 공산국가였든지 아니면 제3세계에 속한 국가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인권, 평등, 분권 의식이 한국보다 훨씬 강해서 조직 문화가 우리와 다르다. 한국의 경우, 조직의 장이 결정을 하면 하위 직원들은 그 뜻에 맞춰 일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동남아 여러 곳에서 KOICA 소장을 역임한 분은, “여기서는 의사 결정 사다리의 모든 사람이 독자성이 강해서, 하나하나 설득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필자는 인도네시아에 재정정보시스템(SPAN)을 구축해 주던 국내 기업이 낮은 문화에 고전하는 것을 보았다. 모든 의사 결정이 만장일치가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만 생각하고, 시스템 수출에 나섰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3)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문제점

나라마다 편차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예산 부처와 재정 관리 부처가 다를 수 있다(예, 필리핀). 이럴 경우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어느 부처가 관할권을 가져야 하느냐를 가지고 갈등이 심하다. 한국의 경우도, 10여 년 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dBrain 시스템이 누구 소관이냐를 놓고 갈등한 적이 있다. 나중에 두 부처가 통합되는 바람에 소관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다. 대통령제 국가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잠재해 있어 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적다. 상대적으로 내각제 국가에서는 재무부가 예산과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dBrain 수출이 용이할 수 있다.

4) 투명성에 대한 다른 생각

개도국이 개도국인 이유 중 하나가 부정부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 중 하나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자금 관리가 낱알이 기록에 남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투명성이 높아진다. 투명하면 부패가 줄어든다. 개도국 국민은 부정부패가 줄어들기를 원한다. 그러나 기득권자들도 과연 그럴까?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일종의 집중화, 중앙화 시스템이다. 따라서 국가 고위층 및 그 집단이 구축하자고 결정해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서는 투명을 좋아하지 않는 고위층이 있다(예, 쿠바 등). 이것 역시 dBrain의 수출에 걸림돌이다.

개도국의 사회구조 및
정서적 특성도
고려할 필요



5) 후진국의 프라이드

아무리 개도국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한글', '거북선'처럼 세계 역사에 남을 발명품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외교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타국을 낮춰 보는 경향이 심하다. 이런 심리적 장벽 역시 ODA를 이용한 dBrain 수출을 어렵게 한다.



4. 가이공옥(可以攻玉)¹⁾

ODA에 관한 한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은 초보다. 이에 비해 수혜국들은 지원받는데 있어서 9단이다.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지배 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내는 교묘한 방법을 체득해 왔다. '예전엔 미국이 지원한다고 법석을 떨다가, 그다음은 일본, 이제는 한국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입안의 혀처럼 굴 줄 안다.

우리가 ODA를 통해 dBrain을 구축해 준다면, 반겨할 나라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시스템 구축 후 한두 해 입맛을 맞춰 주다, 언제 시스템을 폐기할지, 이름만 남겨 놓을지 어찌 알겠는가?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이 특별한 공을 들여야 한다.

수출국 특성에 맞춘
중장기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

1) 유지·보수 기간의 장기화

dBrain 구축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유지·보수비도 고려해야 한다. 약 10년 정도의 장기 보수를 권고한다. IT 시스템은 5년이면 노후화가 시작되나, 개도국에서는 10년까지도 쓴다고 가정하면, 유지·보수비의 장기 지원은 곧 시스템 고도화까지 한국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이 IT 강국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우리가 개도국에 설치해 준 공공 IT 시스템이 호평만 받는 것은 아니다. 유지·보수 기간의 장기화는 우리가 개도국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2) 현지 인력 양성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현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 스스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dBrain 수출과 함께 IT 인력양

1) 타산지석 가이공옥(他山之石 可以攻玉), 다른 산의 못생긴 돌맹이라도 옥을 갈 수 있다는 의미

성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복합 지원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3) 제도개혁보다 전산화부터

IT 분야에서는 단순히 전산화만 해서는 실패하고, 연관된 제도 및 절차까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concurrent engineering).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제도 개선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한 팔의 지원 법칙(one-arm's length)처럼, 도와주더라도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제도 및 절차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그 범위를 넘는 본격적인 개혁은 수혜국의 책임이다.

따라서 dBrain은 해당 국가에 적합한 모듈만 선별하여 수출하여야 하고, 필요 시에는 해당 국가를 위해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줄 각오도 해야 한다.

4) 수출의 경쟁자

dBrain이 국내에서는 독점이지만, 국제 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또는 선점자)들이 있다. World Bank가 뒷받침하는 미국이 최대 강적이고, 필리핀에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호주가 경쟁자이며, 몽골에서는 자원 투자를 많이 하는 캐나다가 경쟁자이다. 동유럽에서는 단연 러시아가 경쟁자이다.

이 선점자들과 경쟁하기 위한 우리의 비책은 비용 절감이다. 현재 개도국들 중에는 100억원 정도면, dBrain을 수입하겠다는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 System, OSS)를 적극 활용하면, dBrain 구축 비용을 200억원까지 낮출 수도 있다. 여기서 20-80법칙에 입각하여 모듈 수를 줄인 슬림형 LEAN-dBrain을 개발하면 100억원을 맞출 수도 있겠다.

5) 현지 문화와 환경을 고려하는 dBrain 수출

개발도상국에 재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 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날 것이다. 캄보디아에는 은행 제도가 매우 미흡하며, 몽골 등 구조권 위성국가들은 아직 정당 우위 전통 때문에 직업 공무원 제도가 불비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민 등록 제도가 없어서, 개인을 특정(identify)하여 자금 이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은행 공동망이 없는 나라도 많다. 이런 환경적 요인을 깨알같이

선점자들과
경쟁하기 위한
우리의 비책은
비용 절감

파악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dBrain 수출이 성공할 수 있다.

5. 결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도국에 dBrain을 수출하는 데 있어 최고의 성공 열쇠는 사랑이다. 수혜국은 지원받는 데 있어서 9단이다. 그래서 공여국이 돈만 추구하는지, 서류상의 실적만 추구하는지 금세 알아채고, 거기에 맞춰 주며 속으로는 비웃는다.

한국이 진정으로 수혜국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사랑)이 있어야, dBrain을 수출할 수 있다. 과거 1950~60년대에 한국이 못살던 때 미국, 일본 등으로 전학 및 실습 인원을 많이 파견했다. 그때 미국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은 반드시 발전할 것이다. 왜냐? 여러 나라 방문단 가운데, 유독 한국 방문단만 질문이 많다.

이제는 우리가 발전하여 공여국이 되었으므로 dBrain을 수출하더라도 사랑과 인내로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현안 분석

현안 분석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연구진들이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재정 현안을 연구·분석한
전문 보고서로 구성됩니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지표 관리

박소영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박소영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soyongp@kpfis.kr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shhan@kpfis.kr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 부채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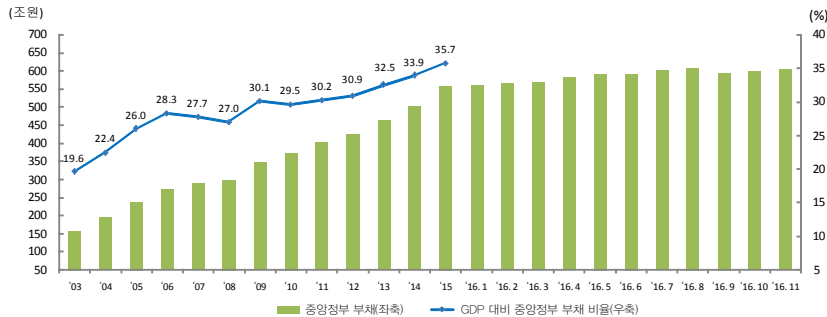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지표 관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더욱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글로벌화되면서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재정 및 거시 경제 위기는 따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불균형은 거시 경제 환경과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시 경제와 금융의 불균형은 재정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EU, IMF를 중심으로 재정 위험 관리, 재정 모니터링,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 부채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을 통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EU, 2016). 또한 선진국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암묵적 부채 증가에 대응하여 재정 위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은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잠재성장률 둔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복지 부분에 대한 재정 소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제한적 이민 정책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도 미래의 재정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해 의료비 및 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적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중앙정부 부채



출처: 〈월간 재정동향〉 2월호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이란 무엇인가?

재정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는 없다. 다만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재정 지속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정부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조달할 수 있는지’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중요시되는 부분은 ‘시점’으로,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때 미래 세대의 재정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재정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재정 균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 지속가능성의 개념상 특징으로, Schick(2005)는 지불 능력(solvency), 성장(growth), 안정성(stability), 공정성(fairness)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은 재정 책임에 대한 정부의 지불 가능성을 의미하며, 성장은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달성을 의미한다. 안정성은 현재의 조세 부담으로 미래의 재정 책임을 달성할 수 있는 재정 역량을 의미하며, 공정성은 현재의 재정 부담을 미래에 전가하지 않는 것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포함한다.

건전한 재정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재정 적자가 지속되어 부채가 증가할 경우 총 저축률이 감소하고, 이는 투자 감소와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전한 재정은 정책 결정자들이 재정 수요에 대응하여 단기적 지출을 가능하게 하며, 재정 우선순위의 지출 요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IMF, 2016). 따라서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재정 여력으로 현재의 재정

재정 지속가능성은
‘정부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조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세입 확대 정도나 지출 조정 정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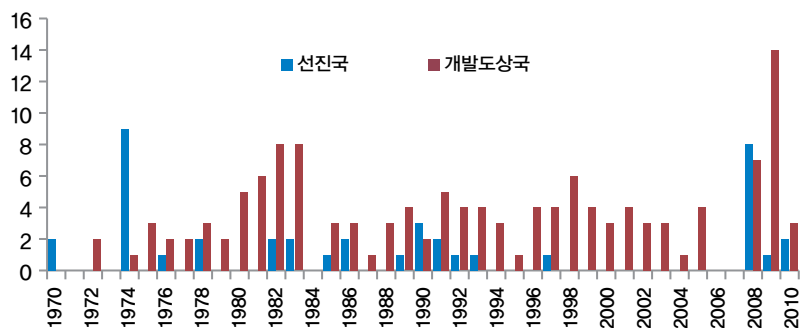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재정 위기(fiscal crisis)의 기준은 다양하다. Hemming et al.(2003)은 대외 민간 및 공공 부채의 원리금 지연이 있거나, 채권자들이 부채 구조 조정 혹은 재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재정 위기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Manasse et al.(2003)은 S&P에 의해 디폴트로 구분된 국가 또는 IMF 출자 지분(quota)의 100%을 초과하는 큰 규모의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를 재정 위기로 정의하고 있다. Baldacci et al.(2011)은 재정 위기 사례는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35% 이상인 경우
- 해당 국가 평균보다 표준편차 2배 이상의 정부 채권 이자율(sovrenign bond yield) 스프레드가 발생하여 상당한 시장 금융 압력이 나타나는 경우
- S&P 기준 공공 부채 디폴트가 발생하거나 부채 구조 조정/재조정이 발표된 경우
- IMF 출자 지분의 100%을 초과하는 큰 규모의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적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

Baldacci et al.(2011) 기준에 따라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재정 위기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일부 선진국들은 1973년의 오일 붐과 1990년 초 불황의 결과로 재정 위기를 경험하였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일부 선진국들이 재정 위기를 경험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은 1980년 초 부채로 인한 재정 위기, 1990년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재정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재정 위기를 경험하였다.

<그림 2> 재정 위기 발생 정도



자료: IMF IFS, Baldacci et al. (2011)

재정 위기가 심각하게 발생한 후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인 재정 위기 관리는 적절한 지표 개발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지표를 통한 재정 지속성 관리는 선제적으로 재정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으며, 위험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도 용이하다. 또한 재정 지표는 재정 지속가능성에 위험이 되는 요소들의 강도, 성격,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재정 지속가능성의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대내외적인 위험에 대해서 직접 추정(direct estimation)하는 방식과 민감성 분석(sensitivity analysis), 확률 추정(stochastic estimation) 하는 방식 등이 있다.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은 우발 부채 등 특정 위험에 대해서 직접 추정하는 것으로, IMF의 Code of Fiscal Transparency에서 강조되고 있다. 민감성 분석은 거시 경제 및 사회 인구 요인의 위험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며, 이들 요인에 따라 재정 변수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IMF와 EU의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이다. 확률적 추정(stochastic estimation)은 불확실성 요소에 대한 확률적 접근을 하는 것으로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 재정 스트레스 지수(Fiscal Stress Index)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 스트레스 지수는 조기 경보 시스템(Early Warnings System)에 기반한 방법으로, 신호 접근법(Signaling Approach)이나 로짓/프로빗 모델(Logit/Probit Model)을 통해서 분석한다. 여기서는 재정 위기를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모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 된다.

**선제적인 재정 위기
관리는 적절한 지표
개발을 통해 수행**

조기 경보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신호 접근법(signalling approach)과 다변량 회귀 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신호 접근법은 위기에 대한 신호 발송을 할 재정 변수의 임계치를 도출한다. 이러한 비모수적 접근법의 바탕이 되는 원리는 몇몇 변수가 위기 혹은 스트레스 사건 발생 이전에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 이전에 각 변수들이 보내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이 방법론은 분석에 포함된 각 변수들의 특정 임계치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각 변수들의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위기나 스트레스 위험 신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변수들은 실제로 위기 혹은 스트레스 사건 이전에 정확한 예측을 하였는지, 평온한 시기에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지는 않았는지 등에 기반한 성과로 순위가 매겨진다.

조기 경보 시스템은
신호 접근법과
다변량 회귀분석이
대표적

로짓/프로빗 모델에 비해, 이 방법론은 각 변수들의 관계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신호 접근법은 다양한 위기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그중 은행 위기 및 외환 위기에 대한 적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로짓과 프로빗 모델을 활용하는 다변량 회귀 분석은 위기가 발생한 경우는 1,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인식된다. 위기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예측은 측정된 상관계수(coefficient)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접근 방법의 장점은 재정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적인 유의미성도 분석할 수 있다. 조기 경보 시스템 초기에는 다변량 회귀 분석 모형이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신호 접근법을 더 선호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EU의 재정 스트레스 지표를 중심으로

조기 경보 모델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위기 예측’을 위한 것은 아니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부분을 사전적으로 발견하여,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위기 촉발 요인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잠재적 위기로 이어지는 경제 취약성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다.

2008년 금융 위기 여파로 인한 부채의 증가는 프랑스, 독일 등 일부 EU 국가들의 재정 위기를 촉발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되었다. 경기 침체 시 재정 지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안정화 장치로 유럽 전역의 재정 지출은 증가하였다. 특히 부채 비중이 높았던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의 과잉 부채 문제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으며 실제 재정위기로 이어졌다. 또한 국가 부채 증가로 회원국 간 재정 상태 불균형이 시장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GDP 성장은 부채 관리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EC, 2016). 이러한 맥락에서 EU 차원에서의 재정 지속가능성의 평가와 논의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와 부채 전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를 3년 주기로 발행하고 있다.

EU 보고서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을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각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진단과 특별한 위험 요인들을 분석, 예측한다. 또한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 고령화의 영향,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 분석, 공공부채 조달 구조, 정부 우발부채, 정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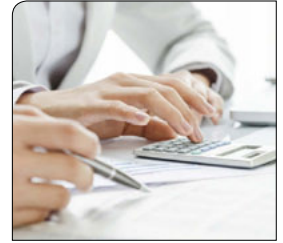
산과 순부채, 공공부채 및 재정 건전화 등 재정 지속가능성 전망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검토하고 있다.

EU의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는 S0, S1, S2로 구분되는 재정 지속가능성 진단 지표를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S0는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의 위험 요인인 재정 스트레스 식별에 사용되며, 재정 건전성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기능을 갖는다. S1과 S2는 재정 격차 지표(fiscal-gap indicator)로써, 이를 통해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한 후 정량화를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중기 평가는 부채 지속성(debt sustainability)을 포함하고, 장기 평가는 고령화 비용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여기서는 단기지표인 S0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재정 스트레스 지표(S0) 구성 및 측정

S0 지표는 단기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재정 스트레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표는 재정(fiscal) 지표와 금융 경쟁력(financial-competitive)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재정 위기를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정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예측력을 살펴보면, 금융 경쟁력 변수들의 예측 능력이 재정 변수들의 예측력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Berti et al., 2012). 이를 통해 재정 스트레스 조기 경보 지수에 거시 경제 변수 및 금융 경쟁력 변수들을 포함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 스트레스 예측 시 재정, 금융 경쟁력 변수 모두를 포함한 복합 지표가 개별 변수들을 각각 고려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좋다(Berti et al., 2012). 재정과 금융 경쟁력 변수(financial-competitive variable) 모두를 고려하여 산정된 재정 스트레스 조기 경보 지수인 S0는 아래 <표 1>과 같다.



위험은 예측할 수 없고,
관리하는 것

〈표 1〉 EU 국가의 재정 스트레스 지표와 분석 결과

Variables	Safety	Threshold	Signaling power	Type I error	Type II error
Balance, % GDP	>	-10.17	0.07	0.04	0.89
Primary balance, % GDP	>	0.00	0.17	0.40	0.43
Cyclically adjusted balance, % GDP	>	-3.12	0.25	0.45	0.30
Stabilizing primary balance, % GDP	<	2.55	0.02	0.12	0.86
Gross debt, % GDP	<	103.28	0.03	0.06	0.91
Change in gross debt, % GDP	<	6.50	0.11	0.08	0.81
Short-term debt, government, % GDP	<	16.00	0.10	0.11	0.79
Net debt, % GDP	<	58.11	0.13	0.19	0.68
Gross financing needs, % GDP	<	16.83	0.16	0.21	0.63
Interest rate-growth rate differential	<	5.92	0.08	0.07	0.85
Change in expenditure of gen. government, % GDP	<	2.25	0.14	0.13	0.74
Change in final consumption expend. of gen. government, % GDP	<	0.64	0.17	0.19	0.64
Old-age dependency ratio 20 years ahead	<	33.93	0.10	0.11	0.79
Avg yearly change in projected age-related public. as % of GDP over next 5 years	<	0.26	0.09	0.14	0.77
<i>Fiscal index</i>	<	0.35	0.23	0.21	0.56
L1.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 GDP	>	-50.10	0.31	0.13	0.56
L1.net savings of households, % GDP	>	0.96	0.34	0.26	0.40
L1.private sector debt, % GDP	<	209.20	0.25	0.04	0.71
L1.private sector credit flow, % GDP	<	10.90	0.44	0.42	0.14
L1.leverage, financial corporations	<	2.22	0.03	0.97	0.00
L1.short-term debt, non-financial corporations, % GDP	<	27.4	0.25	0.21	0.54
L1.short-term debt, households, % GDP	<	3.50	0.27	0.34	0.38
L1.construction, % value added	<	7.25	0.27	0.36	0.38
L1.current account, 3-year backward MA, % GDP	>	-2.45	0.38	0.37	0.25
L1.change (3 years) of real eff. exchange rate, based on exports deflator	<	9.76	0.23	0.19	0.59
L1.change (3 years) in nominal unit labour costs	<	12.70	0.27	0.48	0.25
Yield curve	>	0.59	0.48	0.39	0.14
Real GDP growth	>	-0.89	0.10	0.07	0.83
GDP per capita in PPP, % of US level	>	73.32	0.28	0.44	0.27
<i>Financial-competitiveness index</i>	<	0.45	0.48	0.34	0.18
<i>Overall index</i>	<	0.43	0.55	0.21	0.25

(1) Variable names preceded by L1 are taken in lagged values.

(2) The signalling power is defined as $[1 - (\text{type-I error} + \text{type-II error})]$

자료 : Bertli et al. (2012)

S0 지표는
단기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와
재정 스트레스
조기 발견을 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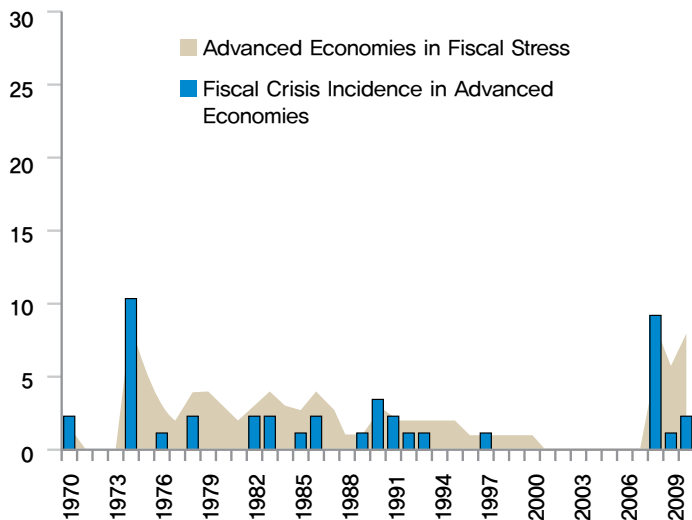
재정 지표 중에서는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경기조정수지, GDP 대비 총자금 수요, 일반정부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예측력이 높은 변수들이다. 금융 경쟁력 지수 중에서는 GDP 대비 민간신용대출, 경상수지 변수가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재정 스트레스 발생의 임계치는 신호 접근법(signaling approach)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이 접근법은 해당 변수가 재정 스트레스 사건을 예측하는 데 있어 능력을 최대화하는 지점인 최적 임계치(optimal threshold)를 계산하도록 설계되었다. 각 변수들은 특정 임계치 이상일 때 재정 스트레스 신호(fiscal-stress signal)를 발생시킨다.

재정 스트레스 지수는 각 지표들의 신호 발송력에 기반하여 계산된다. 우선 각 재정 지표들을 계산하는데 만일 특정 재정 지표가 임계치를 넘으면, 1로 표시하고, 예측력에 따라서 비례하여 가중치를 적용한다. 둘째, 그룹 지표들의 예측력을 평가한 뒤 각 재정 지표에 지표의 예측력, 그 지표가 속한 그룹의 예측력의 가

중치를 곱하여 재정 스트레스 지표를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재정 스트레스 국가와 재정 위기 발생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재정 스트레스 국가 현황



재정 스트레스 지수는
각 지표들의 신호
발송력에 기반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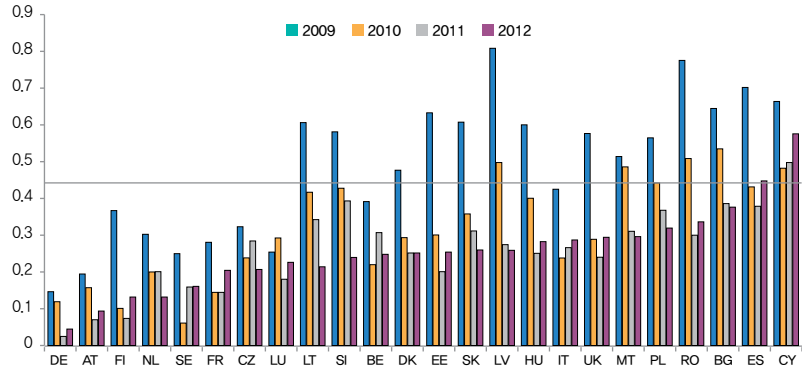
자료: IMF IFS, Baldacci et al.(2011)

2. 재정 스트레스 지표를 활용한 진단 결과

S0 지표가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간 내 재정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임계치 이하인 경우엔 재정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EU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2015)의 S0에 기반한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분석 대상인 EU 26개국 중 단기적으로 고위험에 직면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0가 종합 지표인 만큼 하위 개별 지표에 대한 국가별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S0 지표를 기준으로 할 때, 거의 모든 EU 국가에서 최근 몇 년간 단기 재정 스트레스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4>는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EU 국가들의 조기 경보 지수(S0) 결과를 보여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별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재정 리스크 임계치 이상인 국가가 24개국이었으나, 2012년에는 2개국만이 임계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2009~2012년 EU의 재정 스트레스 조기 경보 지수



자료: Bertli et al.(2012)

재정 지속가능성을 단기, 중기, 장기의 시간 관점으로 나누어 모니터링 해야

정책적 함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가들은 급속히 증가하는 부채와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재정 지속가능성이란 정부가 정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향후 미래 세대의 재정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부채 상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고서는 회원국별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단기, 중기, 장기의 시간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항목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은 국가별로 다양한 재정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속가능성을 관리하는 주요 항목도 다르다. 또한 각 국가들마다 재정 위기 관리 수단의 우선순위도 다르다.

한국도 정책 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기, 중기, 장기의 시간 관점으로 나누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명시적이며 종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재정 위기 예측으로, 정치적 요인에 따른 재정 지출 수요에 대응하여 정책 결정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 판단도 가능하다. 그리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세수 확대 필요 및 지출에 대한 다각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재정 위험 발

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모니터링이 가능하려면 재정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 재정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참고 문헌

- Schick, A. (2005). Sustainable Budget Policy: Concepts and Approaches. *OECD Journal on Budgeting* 5(1): 107-125.
- Baldacci, E., Petrova, I. K., Belhocine, N., Dobrescu, G., & Mazraani, S. (2011). Assessing fiscal stress. *IMF Working Paper WP/11/100*.
- Berti, K., Matteo, S. and M. Lequien (2012). An early-detection index of fiscal stress for EU countries, *European Economy, Economic Papers* No. 475.
- de Cos, P. H., Moral-Benito, E., Koester, G. B., & Nickel, C. (2014). Signalling Fiscal Stress in the Euro Area: A Country-Specific Early Warning System. *Banco de Espana Working Paper* No.1418.
- EU Commission (2016).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5*. Institutional Paper 018. Luxembourg: European Union.
- Hemming, R., Kell, M., & Schimmelpfennig, A. (2003). *Fiscal vulnerability and financial cris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Vol. 218).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 (2016). *Analyzing and Managing Fiscal Risks-Best Practices*. IMF Policy Paper, June. IMF: Washington DC.
- Manasse, P., Roubini, N., & Schimmelpfennig, A. (2003). Predicting sovereign debt crises. *IMF Working Paper* No.03/221.

칼럼



각계각층의 국민이 바라보는 나라 살림 이야기와
국가재정에 대한 생각으로 꾸며지는
국민과 만나는 재정 정책의 장입니다.

국민이 바라본 나라 재정

남대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남대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skynam221@naver.com

재정의 전략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국민이 바라본 나라 재정

청년 대상 일자리 중복 사업 통합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현재는 중복 사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

최근 청년들을 수식하는 문구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세대’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다. 정부의 정책들은 사회 초년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표와 내용은 같은데 이름만 다른 중복 사업이 다수이다. 이는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전략적 배분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청년 대상 정부 사업 중 대표적인 중복 사업의 사례를 짚어 봄으로써 청년의 시각에서 정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의 중복 사례 및 예산 규모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책 대상자와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은 중복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사업의 유사 중복 분석 사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지적하였다¹⁾.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취업아카데미’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의 목표는 정부에서 플랫폼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취업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임금 피크제로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취지를 가지는 등 다양하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는 중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 및 사업주 단체 등 운영 기관 주도

1)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2015.10)

로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대학은 교과과정 학점 인정, 협약 기업은 강사 형태로 교육과정 운영 참여)하여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정(분야) 관련 직무(종)의 협약 기업 등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안)이 전년보다 40억원 증가한 359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이는 고용부의 다른 프로그램인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과 지원 대상자 및 훈련 과정이 유사하며, 대학 지원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해당 유형의 사업 확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다.

고용부에서 새로 도입을 제안한 '중소기업 취업연수 지원'의 내역 사업(30억원) 역시 중소기업청에서 진행 중인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과 비슷하여 신규 도입 타당성이 떨어진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은 임금 피크제와 연동하여 사용되는 정책으로, 지원금 운영에 있어 중복 지원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당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 채용 위축을 완화하여 청년 고용 절벽 해소를 목표로 한다. 2016년 예산안에서는 619억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동 정책과 유사한 세제·재정 지원 제도도 있어 중복 지원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중복되는
정책들을 통폐합하는
작업이 중요

많은 정책, 그러나 여전히 낮은 정책 체감도

2017년 배정된 정부의 청년 정책 예산은 14개 부처(청) 56개 사업에서 2조7000억원 규모다²⁾. 그러나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2016년 청년 취업 지원 의견 조사에서는 '청년 정책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64.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의 도입이나 정책 제안보다는 기존의 중복되는 정책들을 통폐합하는 작업이 정책의 효과성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할 것이다. 정부의 이름만 다른 여러 중복되는 사업을 보며 청년들은 더욱 혼동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복 사업을 정비한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현재, 정부가 개편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른 각 부처 사업들에 대한 방향도 재고될 것이다. 각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한 통폐합은 정부 조직 개편과 같은 큰 변화로부터 동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은 나라 살림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거시적인 재정 정책과 더불어 각 정책이 집행되고 시행되는 단계에서의 효율적 운영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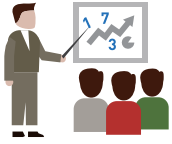
2) [국회보 2017년 3월호] 특집: 사상최악의 청년실업, 해법은 무엇인가-국회의 청년실업 대책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신보라 의원, 2017.03.02.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은 숫자를 이용해
재정 개념을 쉽게 설명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장입니다.

연기금투자플 제도란?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및 연기금투자물운영위원회 홈페이지(www.investpool.go.kr)를 참고하여 연기금투자물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하였다. <편집자 주>

연기금투자물 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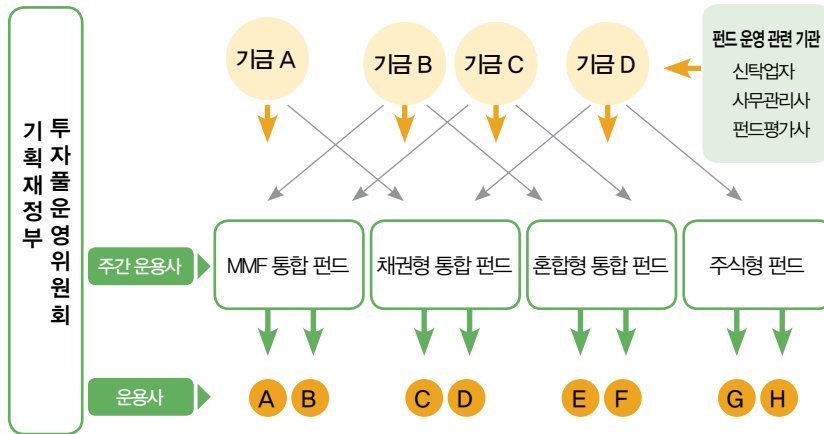
연기금이란 연금(pension)과 기금(fund)을 합친 말로써 일반적으로 연금기금(pension fund)의 줄임말로 통용됩니다. 연금이란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 기간에 기여금을 내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급여를 받는 제도를 의미하며, 기금이란 특정 공공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대 연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여유자산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여유
자금을 통합해 운용

가입자로부터 적립된 적립금은 주간 운용사에 의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형태로 운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 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 운용 기관은 운용 인력의 규모가 작고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금 여유 자금 운용 규모의 경제 달성과 자산 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2001년 12월부터 연기금투자물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기금투자물 제도는 기금의 여유 자산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여유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합 펀드 내에 하위 펀드를 자산으로 편입하는 재간접 투자(fund of funds)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투자물 주간 운용사 및 집합 투자 기구 평가 회사를 선정하고, 연기금투자물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학계, 연구소, 법조계, 언론, 업계 등의 정부 및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투자물운영회’를 설치하여 연기금투자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 1〉 연기금투자플 운영 구조



2016년 4분기 기준 투자플 수탁 규모는 21.7조원으로 도입 초기인 2002년의 1.9조원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채권형과 주식 관련 상품이 11.1조원(총수탁고 대비 51.3%), 7.4조원(33.9%)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가 투자 대상 다변화와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신상품을 도입함에 따라 2016년 4분기 기준 해외 주식형이 682억원 규모를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투자 유형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최근 주식형(국내)의 경우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2016년 4분기 2.09%를 기록하여 벤치마크 대비로도 2.72% 초과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채권형 수익률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벤치마크를 1.6% 하회하는 -3.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 다변화와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신상품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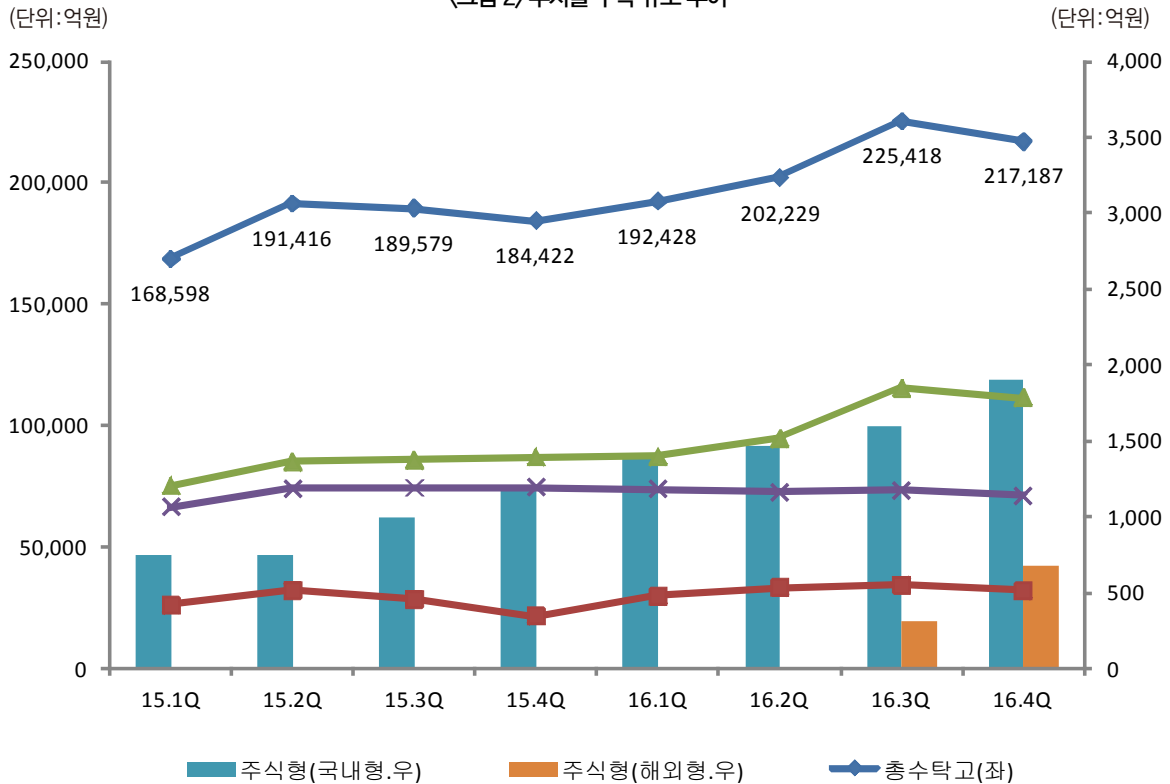
〈표 1〉 투자플 수탁 규모 추이

(단위: 억원, 평잔)

	2015.2/4	2015.3/4	2015.4/4	2016.1/4	2016.2/4	2016.3/4 (A)	2016.4/4 (B)	증감 (B-A)
○ 총수탁고*	191,416	189,579	184,422	192,428	202,229	225,418	217,187	△8,231
MMF	32,083	28,377	21,429	29,809	33,355	34,556	32,011	△2,545
채권형	85,159	85,830	87,091	87,421	94,652	115,627	111,486	△4,141
혼합형	74,174	74,373	74,716	73,779	72,705	73,328	71,108	△2,220
주식형(국내)	750	999	1,186	1,419	1,467	1,591	1,899	308
주식형(해외)	—	—	—	—	—	316	682	366

* 증감은 전분기 대비, 수탁고에 외국환평형기금 예약금은 제외

〈그림 2〉 투자플 수탁 규모 추이



〈표 2〉 투자물 수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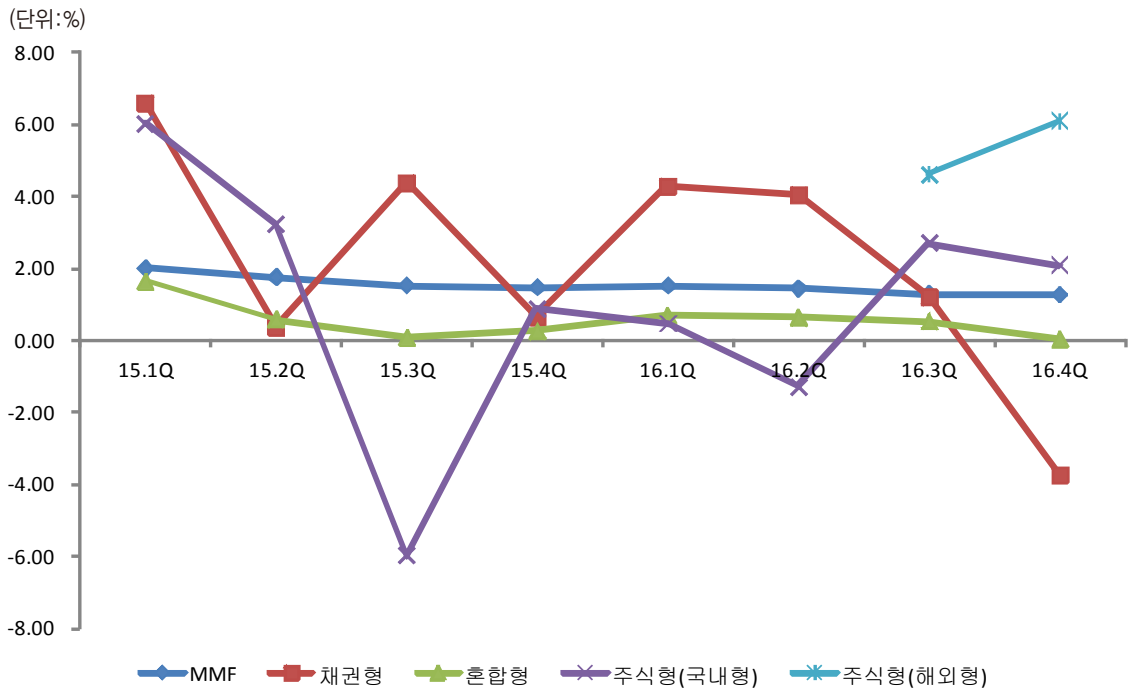
(단위: %)

	2015.2/4	2015.3/4	2015.4/4	2016.1/4	2016.2/4	2016.3/4 (A)	2016.4/4 (B)
MMF	1.76 (0.04)	1.53 (0.05)	1.47 (0.06)	1.52 (0.07)	1.45 (0.06)	1.29 (0.05)	1.28 (0.05)
채권형	0.36 (△0.62)	4.38 (1.05)	0.66 (△0.27)	4.29 (0.66)	4.05 (0.59)	1.20 (△0.04)	-3.73 (△1.60)
혼합형	0.58 (0.35)	0.09 (0.04)	0.26 (△0.13)	0.69 (△0.26)	0.64 (0.01)	0.52 (△0.28)	0.04 (0.18)
주식형(국내)	3.22 (5.17)	△5.97 (0.20)	0.87 (△0.68)	0.47 (△1.81)	△1.28 (△0.10)	2.70 (△1.28)	2.09 (2.72)
주식형(해외)	—	—	—	—	—	4.60 (△1.33)	6.10 (1.13)

* 괄호 안은 BM(BenchMark) 대비 초과 수익률, 유형별 BM은 유형 내 통합 펀드들의 BM 수익률을 펀드 규모로 가중 평균한 값

** MMF와 채권형의 경우 연환산 수익률이며, 혼합형과 주식형은 기간 실현 수익률

〈그림 3〉 투자물 수익률 현황



동향과 소식



국내 재정 동향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새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국외 재정 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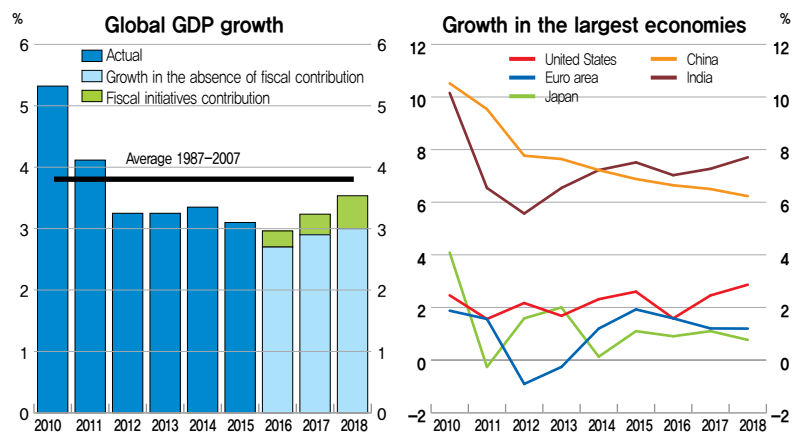
국외 재정 동향

● 세계경제 2018년 3.5% 전후까지 상승할 전망(OECD, 2017.3.7.)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 중간 경제 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세계경제의 원만한 성장을 예측하였으나, 향후 금융 취약성과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완만한 회복세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발표
-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6년 3%에서 2017년 3.3%, 2018년 3.5%까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 최근 몇 달간 소비자 및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됨
 - ▶ 다만, 금리 및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긍정적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분석함
 - ▶ 미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2017년에 2.4%, 2018년에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 유로존은 현재의 경제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독일은 건실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더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 중국은 2018년까지 6.25%로 성장이 둔화되고, 인도는 7.3%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경제성장률 예측〉



Note: Estimated fiscal initiatives contribution based on fiscal stimulus in China and the euro area for 2016-18 and in the United States for 2017-18. Fiscal years starting in April for India
 Source: OECD March 2017 Interim Economic Outlook; OECD November 2016 Economic Outlook database; and OECD calculations

국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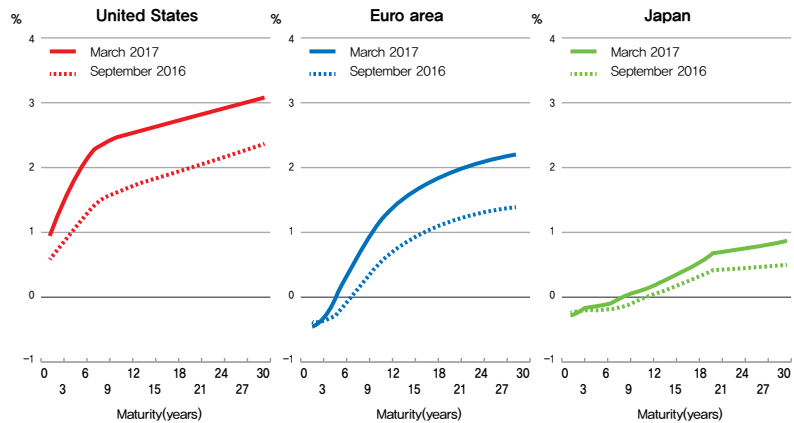


• 다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간 괴리와 잠재적인 시장의 변동성, 경제적 취약성, 그리고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으로 예측

- ▶ 명목 금리의 대폭적인 상승과 명목, 실질적인 장기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크지 않음에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 ▶ 2016년 중반부터 금리 변동 추세가 바뀌었으며 주요 국가들 간 금리 차이가 커짐으로써 환율 변동성 확대
- ▶ 최근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와 같은 환율의 변동 추이와 연관되며 많은 신흥 시장이 외환 시장 변동 등의 충격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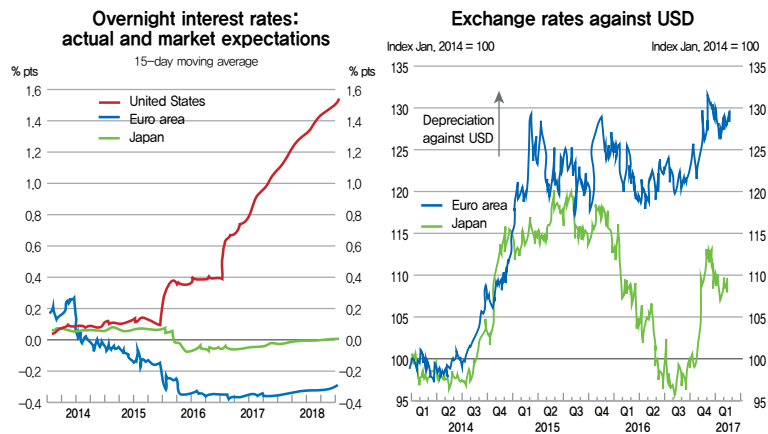
〈국채 수익률 곡선〉

Yield curves for government bonds



Source: ECB; and Thomson Reuters

〈콜금리와 환율 변동 추이〉



Note: Market expectations at 2 March 2017

Source: OECD Exchange Rates database; OECD November 2016 Economic Outlook database; Thomson Reuters; and OECD calculations

국내외 재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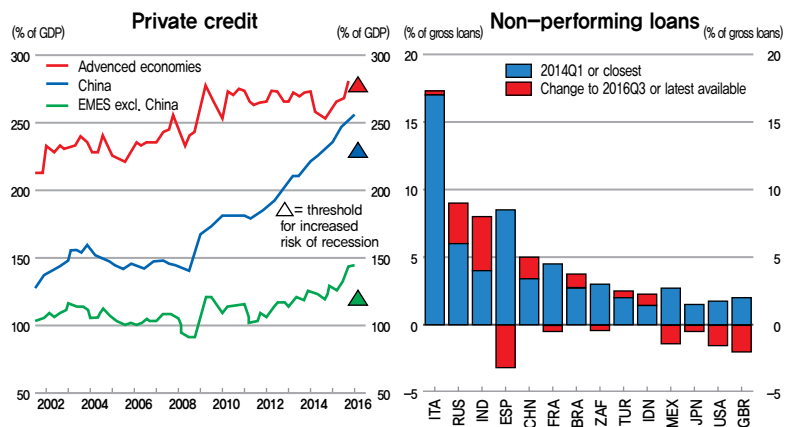
Global
Fiscal Trends



- 최근 몇 년간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함으로써 금융 취약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

- ▶ 금리 정상화로 인해 장기적인 저금리와 국가들의 부채 수준 인상, 자산 가격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 증가
- ▶ 선진국에서는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금융 취약성이 높아짐
- ▶ 기업 부채의 증가와 부실 대출의 확대, 외부 충격에 의한 영향 등과 같은 요인으로 신흥국의 경제 또한 위태로움

〈민간 신용과 부실 대출〉



Note: Threshold estimates from OECD economic resilience framework. For RHS China includes "special-mention" loans. Source: BIS;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Hermansen and Röhn (2017); IMF; OECD Resilience database; and OECD calculations. See www.oecd.org/economy/growth/economic-resilience.htm for further detail

- 장·단기적으로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포괄적 성장을 지향하는 구조적 개혁 필요

- ▶ 국가는 수요를 창출하고 세입을 확충하는 효율적인 경제정책 구현을 위한 재정 여력 (fiscal space)을 마련해야 함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대외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경제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체계가 필요함

국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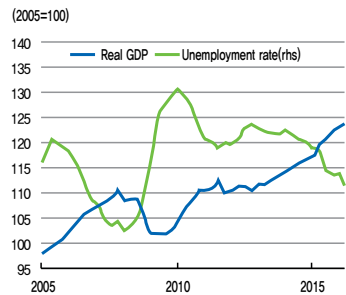


● 스웨덴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득 불평등 등 향후 과제에 대한 대응 필요(OECD, 201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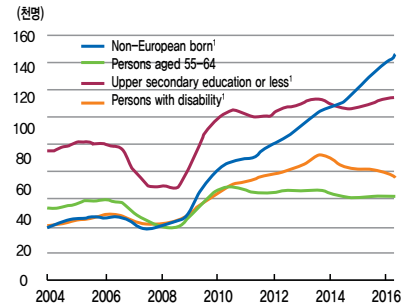
• 스웨덴은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한 사회적 보호망을 제도적으로 구비함. 이는 경제성장을 포함하는 스웨덴 모델을 가능하게 함

- ▶ 최근 노동인구 및 투자 증가,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음
- ▶ 외국 태생 등의 취약 계층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인 실업률은 낮아지는 추세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취약 계층의 실업률〉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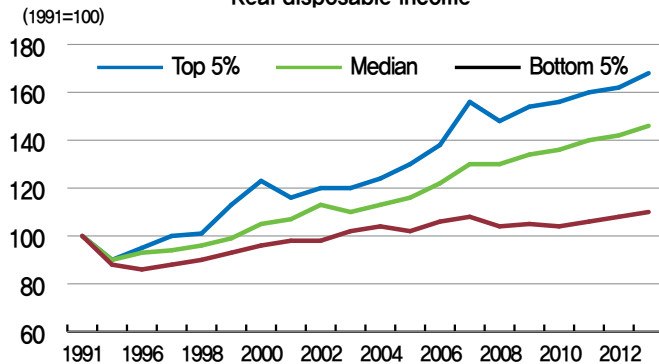
주: 1) 16-64세

출처: statistics Sweden and Swedish public Employment Agency

• 현재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정도는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불평등의 증가〉

Real disposable income



출처: Statistics Sweden

국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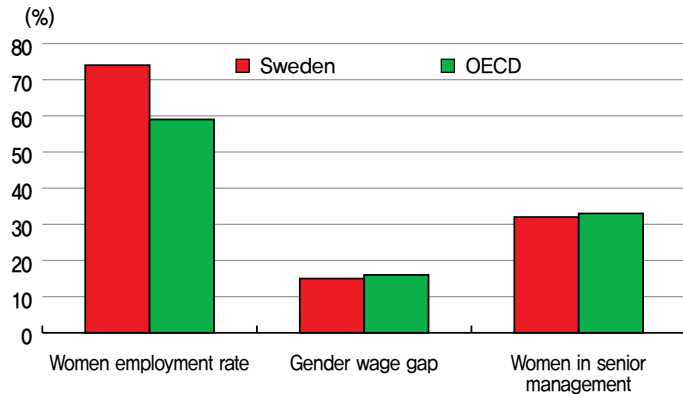
- 주택 시장의 비효율성은 낮은 임금과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임대 시장 규제 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지리적 노동 시장 유동성을 낮춤

▶ 스웨덴의 주택 가격은 급등하고 있으며, 35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가계 부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가구들은 불평등과 노동 이동성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스웨덴은 양성평등 측면에서 모범적인 국가이지만, 남녀 임금 격차, 이민자 출신 여성의 낮은 노동 참여율 등이 문제

▶ 스웨덴의 여성 고용률은 높은 수준이며, 교육 수준도 남성을 능가함. 하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하며, 민간 기업 이사회, 고위 관리직, 영향력이 크고 연봉이 높은 전문직·기업가 집단에서는 충분하게 대표되지 못함

〈성별 임금 격차 및 유리 천장〉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and ILO KILM database

- OECD는 스웨덴의 거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 제언 제시

▶ 물가 목표 수준을 달성할 때까지의 통화 확장 정책 요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민자 통합을 위한 지출 확대 요청

▶ 가계 부채 억제 필요. 총부채 상환 비율(Debt-to-Income Ratio) 제도 도입, 주택 담보 대출(mortgage) 이자의 세액 공제 정책 폐지, 임대 시장 규제 완화 등 주택 가격 안정 노력 주문

국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 ▶ 사회적 편익, 재정 비용, 노동 인센티브 등의 분배적 결과를 고려하여 매년 정책적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이민자들이 거주지를 얻고 취업 허가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하여야 함
- ▶ 남녀 간 평등한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이민자 출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스웨덴은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은 스웨덴의 복지 및 성장 정책을 참고할 수 있으며, 높은 주택 가격에 대처하기 위한 스웨덴 정부의 대응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국내외 재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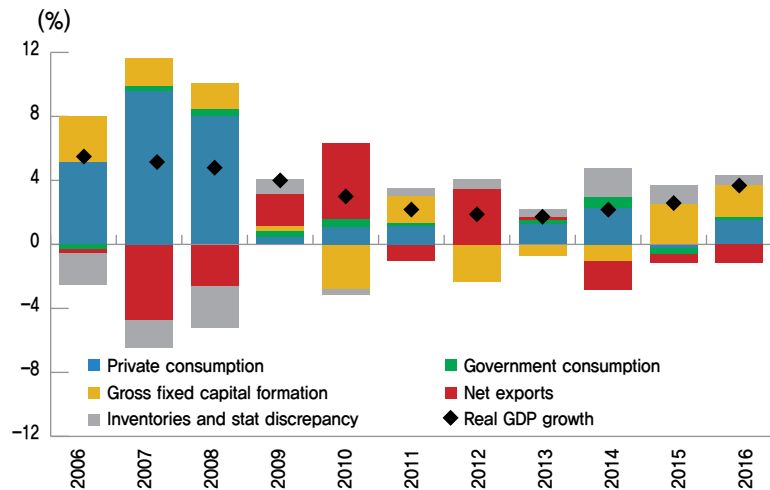
Global
Fiscal Trends



● 알바니아, 지난 3년간 구제금융 프로그램 성공적 이행 (IMF, 2017.2.24.)

- IMF는 알바니아가 경제성장 회복 및 정부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도입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함
 - ▶ 2014.2월 알바니아는 향후 3년간 IMF 확대금융(Extended Fund Facility)을 지원하기로 결정
- 알바니아는 최근 에너지 관련 투자 증가, 소비 등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거시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소비 및 에너지 관련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로 인해 2016.1~9월 중 3%를 상회
 - ▶ (물가) 2016년 초 통화 완화 정책 시행으로 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에 높아짐.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2월 0.2%에서 12월 2.2%까지 회복
 - ▶ (환율) 명목 환율은 전반적으로 안정됨. 2016.12월 기준 1.7%(전년 대비) 평가절상
 - ▶ (신용)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 금리(1.25%)로 인해 민간 신용의 증가 속도는 2016.11월 9%(전년 대비)로 가속화되었지만 전체 신용은 침체. 이는 은행들의 부실 채권에 대한 리스크 회피와 외국계 은행들의 디레버리지 압력 때문임

〈지출의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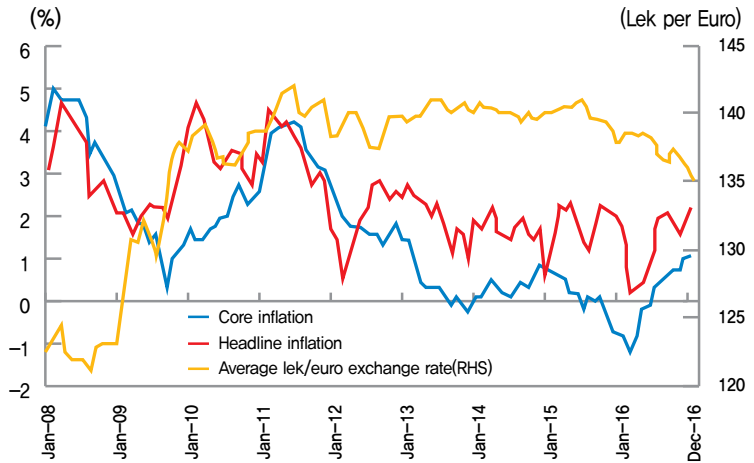
Source : INSTAT

국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물가 상승률 및 환율〉



Sources: Bank of Albania; Haver Analytics; INSTAT; and IMF staff estimates

- IMF의 자금 공여 조건이 되는 실적 기준(performance criteria)과 구조 개혁 벤치마크(structural benchmark) 기준 또한 대체적으로 성공적 이행

▶ 특히, 재정 관리·조세 정책 및 행정·금융 분야·전력 분야 등 네 가지 분야 14개의 구조개혁 벤치마크 중 이행 4개, 지연 7개, 불이행 3개의 실적을 거둠

- 알바니아 재정 당국은 앞으로도 재정 취약성 해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다음 세 가지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

▶ ① 과세 구간의 확충, 납세자의 조세 순응도 및 조세 행정 제고를 통한 재정 건전화 정책 시행, ② 재정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재정 구조 개혁의 시행, ③ 전력 분야의 개혁 유지

- 한편,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고 내수 회복이 초기 단계이므로,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향후 부실 채권 처리가 성장 견인 및 신용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국은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였음. 그 이후 2000년 8월에 구제금융 체제에서 벗어남. IMF에서 지적한 과세 구간 확충 및 재정 관리 강화에 대해 한국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 한국재정정보원-한국재정학회 MOU 체결 및 학술대회 세션 마련

-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학회와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24일 한국재정학회와 MOU를 체결
-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한국의 조세정책: 도전과 과제)」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단독 세션(session)을 구성하고, 논문을 발표
- 한국의 대표적인 재정 연구 전문가 모임인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재정정보원 간의 MOU 체결을 통해 연구 외연 확대와 재정 연구 수행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 한국재정정보원-한국은행,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계정의 정부 부문 계정과 재정 통계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17년 3월 15일 한국은행과 MOU를 체결
- 양 기관은 향후 재정 통계 관련 연구, 학술 세미나, 워크숍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교육 등의 기회를 갖기로 약속

● 아프가니스탄 전자정부 협력대표단에게 한국 경험 전수

- 한국재정정보원은 2017년 3월 2일,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 경험과 성공 요인을 전수받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 참가한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전자정부 협력 대표단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 정부 시스템인 dBrain을 소개
- 국가의 재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실시간 자금 이체 등으로 업무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dBrain 시스템을 소개하고 일부 시스템 기능을 직접 시연
- 이를 통해 향후 아프가니스탄이 자국의 전자 정부 및 재정 시스템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제1차 재정 경제 부문 사이버안전센터 협의회 개최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 산하·연계 기관 보안 담당자와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통해 재정 경제 부문의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가 2017년 3월 1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개최
- 본 협의회에서는 재정 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계획 및 실적을 소개하고, 최신 사이버 위협 등 이슈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보안관제의 공조·연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보안관제 간 상호 공조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전적 사이버 위협 탐지 능력을 키우고, 침해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

● 공공 부문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관한 IT기술 세미나 개최

- dBrain운영본부는 3월 15일 IBM 마다브 부사장(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 및 헬스케어 담당)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공 부문의 디지털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IT기술 세미나 개최
- 디지털 혁신을 위한 최신 기술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소개하였으며, 공공 부문의 혁신 방향으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한 민간과의 개방형 협력 체계를 제안
- 디지털 혁신 기술의 해외 구축 사례 및 발전 추세, dBrain 적용 가능 분야 등 dBrain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We, TongRo Image Stock, since commence with producing digital image slide transparency business in 1992 have been building outstanding success in distributing various kind of collections from overseas countries to Korea and in supplying our own collections to many countries through around 45 channel partners.

35%

We, TongRo Image Stock, since commence with producing digital image slide transparency business in 1992 have been building outstanding success in distributing various kind of collections from overseas countries to Korea and in supplying our own collections to many countries through around 45 channel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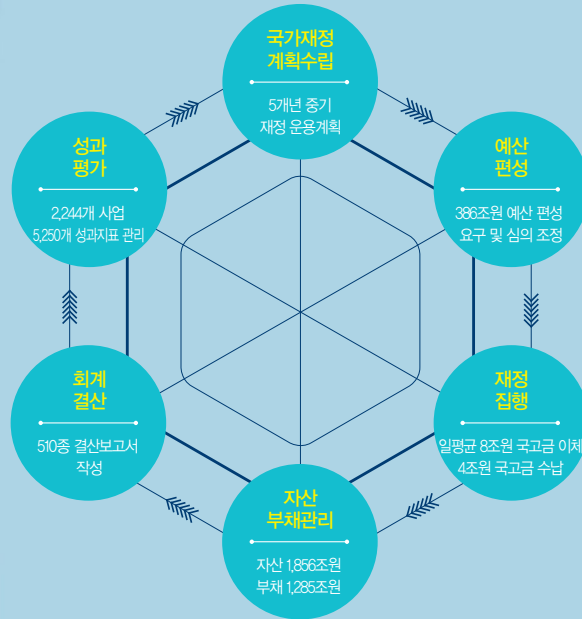
70%

We, TongRo Image Stock, since commence with producing digital image slide transparency business in 1992 have been building outstanding success in distributing various kind of collections from overseas countries to Korea and in supplying our own collections to many countries through around 45 channel partners.

국가 재정업무의 '중추' dBrain을 운영합니다

dBrain은 예산의 편성·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결산, 성과 관리 등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을 포괄·지원하는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입니다.

- 지속적인 자동화 및 기능 개선을 통한 재정업무 효율화
- 고객 중심의 사용자 교육 및 편의성 확대
- 차세대 dBrain 구축 준비



연간 1억건이 넘는 재정업무가 dBrain에서 처리됩니다

현황

일평균 8조원의 지출, 4조원의 수납 처리

일일 평균
업무 처리 현황

전체 사용자 수 **64,254** 명

사용자	국고금 이체 금액	국고금 수납 금액	업무 처리 건 수	사용자 call 수
15,532명	8조원	4조원	48만건	1,657건

(단위: 일평균, 기준 2016년)

신뢰성 있는 재정통계를 생산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의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dBrain) 운영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재정 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재정정보 연구본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 통계를 분석하고
재정 제도 개선을 지원합니다.

재정 교육 사업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dBrain 국제 협력

국제 금융 기구(WB, IDB, ADB 등)와
재정 정보화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재정 혁신 및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합니다.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정보 통신망을 보호하는
재정 경제 분야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로서
종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고 보조금 통합망 운영

국고 보조 사업 전 과정을 통합화·표준화·전자화하여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근절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합니다.

월간

나라 재정

3월호

월간 나라재정 2017년 3월호

통권 제3호(발행번호)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이원식(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본부장)

편집위원

강영규(기획재정부 과장)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수)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박소영(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승희(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김도일(한국재정정보원 연구원)

디자인·제작 더쥬커뮤니케이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재정 전문 연구기관

재정의 통합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재정 운영 지원

통합·체계적 재정
·정책 통계 분석

+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관리 지원

- 재정 통계 분석 기법 개발
- 재정 통계 분석 및 재정 정보 공개

- 각종 재정 사업 평가 및 관련 연구
- 재정 정책 전반 연구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